

## 국내 체류 외국인 265만명 역대최대

# 지방은행 '외국인 전용 대출' 속도

지방은행, 외국인 시장 선점 나서  
초기 거주비·생활비 등 수요 분별  
i뱅크·경남은행 등서 상품 선배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금융 수요가 빠르게 늘어가 는 가운데, 지방은행들이 외국인 전용 대출 취급을 확대하며 시중은행보다 한 발 빠른 시장 선점에 나섰다. 거점지역 내 인구 및 산업 유출이 가속하면서 외국 인 고객이 지방은행의 거점지역 내 주요 고객층으로 부상하고 있어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65만명이다. 직전 년도보다 15만명 (5.7%) 늘어 역대 최대 규모다. 같은 기 간 국내 은행의 외국인 등록 고객 수도 813만명을 기록했다. 외국인 체류자의 약 3배 이상에 해당한다. 통상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장기 체류자는 임금 지급·장학금 수령 등 경제활동을 위해 은행 계좌를 개설한다.

외국인의 금융 수요가 늘면서 은행 권에서도 접근성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4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 리)과 주요 지방은행(부산·iM·경남·광 주·전북)은 통역을 제공하는 외국인 특 화 점포를 설치 및 운영 중이며, 인터 넷·모바일 뱅킹에도 다국어 번역 서 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성 개선 움직임에도 국 내에서 외국인이 이용 가능한 은행권

금융 서비스는 다소 제한적이다. 국내 의 금융 서비스가 엄격한 실명 기반으 로 이뤄지고 있어서다. 재직 기업의 보 증이나 담보가 불충분하다면, 외국인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 스는 계좌 개설, 체크카드 발급, 환전· 송금 등 신용 정보와 무관한 상품에 한 정된다.

시중은행들이 예·적금과 환전·송금 등 기존 외국인 대상 서비스에 집중하 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반면, 지방 은행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재직정보, 체류 기간 등 대체 정보를 활용한 외국 인 전용 대출 상품의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정착 초 거주비·생활비 등 소액 대출 수요가 분명한 만큼, 성장성 높은 외국인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각 지방은행이 운영중인 외국 인 전용 대출 상품은 ▲웰컴(WELCO ME) iM 외국인 신용대출(iM뱅크) ▲K드림 외국인 신용대출(경남은행) ▲투게더(TOGETHER) 유학생 신용대 출(광주은행) ▲JB 브라보 코리아(BR AVO KOREA) 특판 대출(전북은행) 등이다. 부산은행은 별도의 전용 대출 상품은 없지만, 김해점을 비롯한 특화 점포에서 외국인 대출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지방은행 외국인 전용 대출 상품의 금리는 중·저신용자 상품이나 카드론· 저축은행 대출 등 제2금융권 대출과 비 슷한 연 8~18% 수준이다. 일반 신용대 출 상품보다 수익성이 높다. 또한, 외국

인 고객의 입장에서 지방은행의 대출 상품이 네팔·캄보디아·카자흐스탄 등 출 신국 은행권 금리와 비슷하거나 낮은 가 격에 이용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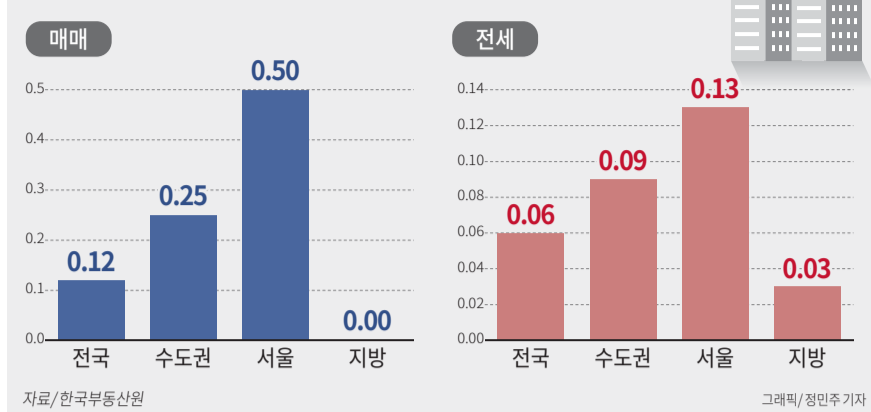
지방은행들이 외국인 고객 확보에 힘쓰는 것은 지역 경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서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광 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등 록외국인 수가 가장 빠르게 늘어난 곳 은 경북(17.6%)이다. 전북(12.6%), 전 남(11.4%), 경남(11.4%) 등 각 지방은 행의 거점지역도 등록외국인이 10% 넘게 성장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등 록외국인 성장률은 8.67%였다.

지방은행들이 외국인 전용 대출 상 품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가운데 국 내 외국인 대출의 대다수도 지방은행 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앞서 김기홍 J B금융그룹 회장은 올해 상반기 컨퍼런 스콜(IR)에서 전북은행이 공급한 국내 외국인 대출 점유율이 전체의 약 70% 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의 금융 니즈도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지방 소 멸로 지역 경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 는 비중이 빠르게 커지는 만큼, 지방은 행의 입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외 국인 고객의 금융 수요 흡수를 위해 상 품 개발과 서비스 개선을 지속하는 것 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지수 변동률 단위: %



## 10·15 대책에 서울 아파트값 38주째 ↑

서울 아파트값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38주 연속이다.

특히 성동구·강동구·광진구 등 '한강 벨트'와 경기 과천·성남 분당 등은 1% 대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규제 발표 이 후 실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까지 5 일 가량의 시차로 인해 막차 수요가 쏠 렸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의 10월 셋째 주 주 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50% 올 랐다. 전주(0.54%) 대비 상승폭이 축소 됐지만 3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규제시행 5일 시차에 막판 수요 광진 1.29%, 성동 1.25% 상승 전국 기준 0.12%, 지방은 보합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정주여건 이 양호한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단지 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와 거래가 증가하며 상승 거래가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 다"고 설명했다.

강북에서는 광진구(1.29%)는 광장· 구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동구 (1.25%)는 금호·행당동 역세권 위주로 가격이 뛰었다.

강남에서는 강동구(1.12%)는 명일· 고덕동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 (0.96%)는 목·신정동 역세권 위주로,

송파구(0.93%)는 방이·문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0.12%, 수도권은 0.25% 올랐다. 경기에서는 성남 분당 구(1.78%)와 과천시(1.48%)의 상승물 이 두드러졌다. 지방(0.00%)은 보합세 를 유지했다.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를 보 일 전망이다.

부동산R 114관계자는 "10·15대책 효과가 온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 지만 서울지역의 주간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을 뿐만 아니라 대책 발표 이후 규제지역 아파트 거래량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6·27대책 대비 10· 15대책이 더 강력한 대책으로 평가되 는 만큼 규제지역 내 아파트 시장은 거 래 급감, 가격 상승폭 둔화 현상들이 상 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역시 0.06% 올라 전주(0.07%) 대비 상승폭 이 축소됐다. 수도권(0.11%→0.09%) 도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은 매물 부족으로 전세가격이 0.13% 올랐다. 역세권·학군지 등 정주 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계약이 체결 되며 서울 전체를 끌어올렸다. 양천구 (0.29%)는 목·신정동 학군지 위주로, 서초구(0.29%)는 잠원·우면동 위주로, 송파구(0.27%)는 방이·잠실동 주요 단 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4%→0.03%) 전세가격은 5 대광역시(0.04%), 8개도(0.01%) 모두 상승폭이 줄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보릿고개' 카드사, 3분기도 실적 난망

가맹점 수수료 수익·카드론 잔액 감소  
삼성카드 등 카드사 영업의 줄어들 듯

카드사들의 하반기 실적 발표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분기 실적 개선 도 요원할 전망이다. 카드론 잔액 감 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이 주요 실적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2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상장사인 삼성카드의 올해 3분 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2% 감 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카드사들의 사정 또한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예상 실적 부진 원인이 로 업계 전반의 거시적인 변수가 지목 되고 있다.

그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다. 실제 올해 상반기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KB 국민·롯데·하나·우리·BC)의 순이익 은 1조 22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93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2911억원 감소하며 총수익 하락세를 견인한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1313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관련 수익이 약 4200억원 약화된 셈이다.

지난 2월 정부의 가맹점카드 수수료 율 인하책에 따른 영향이다. 정부는 연



카드사들의 3분기 실적이 주춤할 전망이다. 서울 한 음식점 앞에 결제가능 신용카드 스티커가 붙어 있다. /뉴시스

매출 1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 가맹점 은 0.10%포인트(p), 연 매출 10억~30 억원 중소 가맹점은 0.05%p 규모로 카 드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카드론 잔액 감소 현상도 실적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전업 카드사 9곳(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NH농협카드) 카드론 잔액은 5월(42조 6571억원), 6 월(42조 5148억원), 7월(42조 4878억 원), 8월(42조 4483억원), 9월(41조 8375억원)까지 4개월 연속 하락세다.

카드론은 카드사들의 주요 수익원으 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 의 '6·27 가계대출 관리 대책'으로 카 드론이 신용대출 범위에 포함, 대출한 도가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됐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에 따라 카드업계 카드론 사업 규모가 위축된 것이다.

최근 상승하고 있는 연체율도 위험 요인이다. 현재 카드사의 올해 8월 기 준 연체율은 3.3%로, 지난 2021년 1.9%였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 승했다. 연체율이 오르면 카드사들은 리스크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더 쌓 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손충당비가 늘어나 총비용이 커져, 수익성에 부담 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의 순이익 감소 도 예상된다.

한국투자증권 백두산 연구원은 "상 장사인 삼성카드의 3분기 순이익은 1596억원으로 컨센서스를 4% 하회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하나금융,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 신설

'경제성장전략 TF' 구축

하나금융그룹은 금융권 최초로 이사 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 고, 그룹 전사적 차원의 금융소비자보 호 정책 추진을 위한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26일 밝 혔다.

하나금융은 현재 전(全) 관계사가 참 여하는 '경제성장전략 TF'를 구축하고 ▲관세피해기업 지원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금융소비자보호 ▲디지털 금융 주도 ▲전국민 자산관리 지원 등 6개 분야에서 전사적 실행계획을 단 계적으로 이행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 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6개 분야 중 ▲금융소비자보호와 관 련된 정책과 성과를 최고 의사결정기 구에서 직접 평가·관리 ▲금융소비자 보호를 법규 준수나 리스크 관리를 넘 어 그룹의 최우선 가치이자 핵심 경쟁

력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사회 내 기 존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에 소비자 보호 역할과 기능을 대폭 추가한 '소비 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와 동일한 체계를 자회사 내 구축함으로써, 지주 와 자회사 간 금융소비자보호 전략의 정합성과 실행력을 한층 끌어올릴 계 획이다.

함영주 회장은 "그룹의 통합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금융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모든 규정과 제 도에 대한 전면적 쇄신을 이루고, 금융 산업 소비자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새 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금융소 비자보호를 위해 손님·주주·직원·사회 와 장기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쏟 아보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